

더민주, 대선주자 의견 수렴 기구 신설

캠프 의견 모아 공정성 확보 시기·선거인단 경선룰 논의 순학규 참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 당내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관계자는 3일 “당내 모든 대선 주자들의 측근 인사들 중 한 명씩을 모아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지금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에 따르면 대선 1년 전까지는 경선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소통 기구를 만들어 물밑 조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와는 별도로 더민주의 대선 시제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의 모든 잠룡들을 망라하는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순학규 전 대표 측 인사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 “물 얘기뿐 아니라 당의 대선 전략에 대한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듣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역시 경선룰에 대한 이견조율이 핵심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이대문’이대로 가면 더민주의 후보는 문 전 대표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과 소통하지 않고 경선룰을 확정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오찬회동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새누리당 김도읍·국민의당 김광영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할 경우 일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쟁점으로는 경선 시기, 권리당원 비율을 포함한 선거인단 구성방식 등이 꼽힌다. 시기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들은 최대한 경선 시기를 늦출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선이 3월 이전으로 당겨질 경우에는 지지체장을 사퇴하면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경선방식의 경우 더민주는 당규상 완전 국민경선(국민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

혹은 국민참여경선(당원과 국민이 일정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 중 택하도록 돼 있다. 전통적으로는 친노(친노무현)진영이 국민경선을, 비노(비노무현)진영이 당원들이 포함된 국민참여경선을 선호했지만, 지난해 분당사태 이후 신규 당원들 대부분이 친노성향이어서 오히려 당원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친노진영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각 캠프들이 이후 치열하게 각각의 유휴리를 계산하며 조율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대 첫 정기국회가 한창인 데다 최근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어 주자들 간 소통기구 구성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손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전 화전화에서 “아직 손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임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며 “지금 단계에서 손 전 대표 측 인사가 대선 경선룰을 조율하는 실무기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 고심 野 “미르·K스포츠 꿈수 해산 안돼”

내주초 선출될 듯

국민의당이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차기 비대위원장 임기는 오는 12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대의 공정한 관리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2기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비대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인 10일 전후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당내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며 차기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

당은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무게를 뒀으나, 대부분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내부 인사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주승용 비대위원 등 중진들도 고사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초선으로 비례대표 1번인 신용현 의원이 ‘깜짝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여성인이다 과학 혁명을 지향하며 참신하고 미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무 경험이 없는 초선이라는 점에서 미덥지 않은 시각이 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원외 인사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 외부인사 영입을 놓고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혜 의혹 밝히고 영구 해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잘못을 가리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두 재단을 영구 해체하는 것은 물론 그와 별도로 특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할 청와대는 뒤로 숨고, 전경련이 의혹을 덮고 수수하는 것”이라며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은 잘못대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왜 두 재단을 해체 하느냐”며 “새누리당 국정감사 파행이 두

재단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꼼수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재단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하라”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미르재단이 설립허가를 받기도 전에 등기 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이용주 법률위원장,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르재단의 등기신청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의 설립이 승인된 것은 지난해 10월27일이지만 법원에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것은 이보다 하루 전날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 영사 66명 뿐”

국민의당 박주선

전 세계 163곳에 달하는 재외공관에 소속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66명에 불과했다. 중국 14명, 일본 6명, 미국 5명, 필리핀 4명, 베트남 3명, 러시아와 인도·캐나다가 각각 2명 등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5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는 1931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 건수도 2011년 4458명에서 작년 8298명으로 86.1% 늘었다. 박 부의장은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전담 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수공, 용수판매로 1천억 수익 보고도 물값 인상”

국민의당 주승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용수 판매사업으로 1000억원대의 이익을 봤으면서도 올해 물값 4.8%를 기습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은 이익을 남겼지만, 수자원공사는 물값 현실화 명분으로 최근 광역수도 요금과 담 용수 판매 요금을 각각 4.8% 올렸다.

30일 국회 국토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용수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모두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014년 1005억원, 2013년 1011억원, 2012년 913억원을 벌어들였다.

주 의원은 “물 판매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수자원공사가 또 물값을 올리는 건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물값을 올린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용수판매를 통해 1000억원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선금 지원 전남 최다... 열악한 주거 현실 반영”

국민의당 윤영일

정부로부터 수선금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전남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주거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000원으로 수선금 역시 가장 많았다. 전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자가가구 수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선금 지원을 받는 자가가구수가 전남은 15%가구를 전국 전체 9천787가구의 16%로 가장 많았다. 가구당 평균 수선금은 414만

윤 의원은 “농어촌지역에는 자가가구를 보유하나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집 수선의 필요성이 높다”며 “정부의 자가가구 지원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

더민주 약칭 ‘민주당’ ‘더민주’ 모두 사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에 따라 약칭을 ‘민주당’과 ‘더민주’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 및 약칭 결정은 오는 29일 중앙위 의결로 확정된다.

만나 “통합과 맞물려 ‘전통적 이름’인 민주당을 선호하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젊은 지지자들이 다 감안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병기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